

보도시점 2026. 6. 22.(월) 배포 즉시

사업장변경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6. 22.(월) 조선일보, “1년 만에 이직?...외국인 의무근무 단축 앞둔 中企 ‘비상’”

-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말 비전문 외국인력(E-9)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.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의무 근무 기간을 3년에서 1~2년으로 줄이고, 이 기간만 채우면 비수도권 안에서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. ‘1년 안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. (중략)

2. 설명 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·사,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, 전문가, 관련부처 등과 함께 '25.12.~'26.2.까지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TF」를 운영하였으며,

- TF 내에서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

□ 다만, 의무 근무기간, 이동 가능한 권역, 장기근속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으며,

- 이주노동자 인권, 국내 기업의 인력난, 취약계층 노동자 일자리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

※ 사업장변경 관련 현제도 의무 근무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, 최초 3년간의 취업 활동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 3회, 휴업·폐업, 인권침해 등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최주현 (044-202-7145)